“호남고속철 2단계 2년 앞당겨 2023년 개통”

〈광주송정역~목포〉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100일 회견

전남형 기본소득제 2020년 시행 한전공대 부지 전남에 위치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광주송정역~목포역 구간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3년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민·어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수당을 포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이후 주요 성과와 임기 내 역점 추진 시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100일 동안의 성과로 혁신성장·일자리·생활SOC 분야 등 내년도 신규시책 119건을 발굴하는 등 도정방향과 추진 체계를 확립한 점을 들었다.

또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국고예산 6조원 확보·조선산업 위기 극복 등 지역현안 신속 대처 등도 성과로 꼽았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및 전남·광주·경남·부산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도지사-시장·군수 상생발전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광역 상생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향후 10대 역점 추진 시책으로 ▲체감형 도민 행복시책 실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12만개 창출 ▲에너지사이언스파크 조성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 ▲섬·해양과 내륙을 잇는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스마트 농축어업 혁신모델 개발 ▲핵심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지역개발 추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 및 도민 소통 강화 ▲전남평화재단 설립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주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SOC 사업과 관련, 김 지사는 “무안공항 활성화의 필수요소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에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2021년 이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무안·광주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컨베이어벨트 확장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수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방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전남이 마냥 반대만 해서도 안 된다. 전남도가 기관 간 조정 역할과 지역주민의 대변 역할을 한다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공대 위치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전남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전남평화재단 설립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도 34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벼 논에 그려진 ‘전라도 정도 1000년’

수확의 계절을 맞아 농도 전남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들녘에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알리는 색깔 벼가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지난 5월 농업테마공원에 심은 자도·적도·황도 등 색깔벼가 농업이 주는 색의 변화와 예술성을 뽐내고 있다. 모를 심을 때부터 수확하기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벼의 색깔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색깔벼 논그림 전체 면적은 가로 90m, 세로 80m에 달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46억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10일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보조금은 광주 4억1100만원, 전남 41억6700만원이다.

광주의 경우 2016년 6800만원(13건), 지난해 2억4900만원(807건), 올해 6월 기준 9400만원(36건)이다. 전남은 2016년 11억5800만원(72건), 지난해 23억4000만원(114건), 올해 6월 기준 6억6900만원(15건)이다.

지난 3년간 실제 환수된 비율은 광주 96.8%(3억9800만원)로 대부분을 되찾았으나 전남은 29%(12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548억11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이 중 57.9%인 317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하면서 공모를 통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보조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하는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신고체계, 환수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 광주·전남 R&D 예산

5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송갑석의원 ‘2013~2017년 지원 현황’ 전체 지원액 광주 0.79% , 전남 0.48%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광주·전남지역의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최근 5년 연속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아 10일 배포한 ‘2013~2017년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52건에 총 314억 원, 광주는 110건 사업에 총 509억원을 각각 지원받아 제주·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R&D 지원액 6조4856억원 중 광주 0.79% , 전남은 0.48%에 불과한 것으로 5년간 연속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 비중이 1.44%였다.

또한 과거 보수정부에서 R&D 예산 지원의 지역적 편중도 심각했다. 5년간 국가 R&D사업을 통해 지원된 전체 예산의 52.9%인 3조4316억원이 수도권에 집중 투자됐다. 전체 예산 대비 영남권 25.7%(1조 6675억원), 충청권 17.5% (1조 1341억원)이었으며 호남권은 175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해 2.7%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시는 이명박 정부시절 R&D 특구가 들어섰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극심한 예산 홀대가 지속됐다. 광주의 경우 6대 광역시 중에서 지난 5년 연속 지원금 최하는 물론 전체 광역시 지원 금액에 대비 3%(509억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보수정부의 R&D 예산 편중은 지역 대학도 비껴가지 않았다. 호남권 대학의 R&D 지원금은 1243억 원으로 전체 대학 R&D 예산 대비 6.6% 에 불과해 이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 중심 되는 신산업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의 심각한 편중으로 광주 R&D 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노경수 교수 임명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노경수(56·사진)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노 교수를 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3년 임기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민선6기 때 공모가 세 차례 연거푸 무산되면서 1년9개월째 사장이 공석이었다.

신임 노 사장은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시장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 도시재생특별위원장을 맡아 ‘GREAT 광주 도시재생 5대 공약’ 등 광주재생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선 7기 인수위격인 광주혁신위에서 도시재생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서울대 공학박사(도시계획 전공)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평가위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고도(경주·부여·공주) 보존위원, 광주시 도시재생위원,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경과를 보고했다. 업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회의 결론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 신임 사장의 장점으로 ▲도시계획·도시재생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행정·실무 경험과 진단능력 ▲중앙 정부, 전문가 영역 등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확대 의지와 능력 ▲광주형 도시재생 로드맵 실현과 특색있는 혁신아이디어 발굴 기대감 ▲단순 수익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정책 소신 등을 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용훈 광주환경공단이사장 12월 사임 의사 밝혀

안용훈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오는 12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지난 2016년 6월 제7대 광주환경공단이사장에 취임했고, 임기(3년)는 2019년 6월까지였다.

안 이사장은 “2년 6개월간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음식물·생활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혐오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생태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광주천과 영산강을 만들기 위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또 보람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사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민선7기 시정 방침에 맞는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 환경공단을 이끌어 주기 바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공단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